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 그 위기와 극복방안

이 증 수 / 중앙대 행정학과 강사

대학이나 학술연구의 진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학술문화가 발전되고, 세계 속의 우리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학술문화를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한 바, 종합적인 학술진흥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과학기술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인문·사회과학을 홀대하거나 침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1. 서론

우 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선봉장으로서 과학기술 우선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를 이끌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이 상당 부분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에 맞이고 있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1960년대 이래 국가가 추구해온 이러한 물질적 성장 중심 정책에서 비롯된 현상으로서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치혼란과 부패, 부조리, 배금주의, 물질중심주의 등으

로 이어져 결국 'IMF 한파'에 내밀리는 지경에 이르러야 말았다.

가치관의 혼란은 정신문화와 학술문화가 빈약한 경제 성장 중심 국가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다. 한국은 본래 학문과 문화, 정신적 풍요를 물질적 안락보다 가치있게 생각해 왔던 전통을 지녀 왔으나,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그 자리에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자리하게 되어 급기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되기에 이른 것이다.

작금의 한국 사회의 실상을 보자. 경제는 파탄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사

회는 부조리 그 자체이다. 한마디로 '총제적 난국·부패·위기'의 적나라한 온상을 보는 듯하다. 이와 같은 '위기'의 배경에는 실정과 정경유착, 관료부패에 대한 외부통제의 미약 등의 원인과 그 동안 교육계를 비롯, 각종 국가고시나 시험제도에서 정량화된 점수 위주로 인간을 평가해 온 인력양성 및 충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특히 외형적 성장에 안주해 온 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21세기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기보다 '큰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즉, 상이한 문화와 개체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원화의 세계가 그것이다. 따라서 목전에 다가온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교육은 개인의 적성과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화·특성화 교육이 가장 중시될 전망이다.

그런데 국가발전의 토대 구축과 응용원리 개발은 학술진흥에 있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즉, 기초이론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두뇌와 전문인력을 자력으로 양성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현 시점의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오늘의 경제·사회 위기를 자초한 물질·정신적 위기의 원인을 포스트모던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학술연구의 여건 등 실태를 살펴본 다음, 인문·사회과학(예술 부문을 포함)의 '위기' 문제와 이들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인문·사회과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

한국 인문·사회과학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이들 학문들이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또 새로운 생산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학문으로 매도되어 정책적으로 도외시되어 왔음을 예로 들 수 있다(배규한, 1997: 6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균형적 학술지원정책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동시에 한국 인문·사회 현상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론적 연구와 결합할 수 있는 학문적 토양 구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1) 변화의 동인

흔히들 한국은 현대와 탈현대의 혼돈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중·장년기 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의사소통의 막힘' 현상 등이 그것이다. 근래 대학 신입생이나 고교생들은 판단 기준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며, 또한 과거처럼 떼지어 다니거나 조직·집단 중심의 행동 또는 사고가 아니라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그것을 편하게 느끼는 생활양식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김경희, 1996). 특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82%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0%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누구라도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한다고 답한다

(서울특별시, 1996). 이와 같은 개인화된 사회성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그룹중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현대사회에서 탈현(근)대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가사회의 심층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삶의 여러 조건은 특정사회 내에서의 생활주체들의 사고와 행위를 변화시키게 된다. 행위주체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는 제도와 관행을 바꾸며(박은희, 1995), 국가권력의 변질 및 정부 역할과 기능을 바꾸게 한다. 이렇게 개인의 의식, 행동과 국가권력 및 제도적 변화를 촉발시킨 독립변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교통 발전이 그 주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포스트모던기의 사회는 1, 2차원적인 현대 산업사회를 시·공간적으로 다차원적인 탈현대사회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하버마스는 정보통신 혁명과 뉴미디어 혁명을 통해 노동시간이 줄고, 자유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의 문화화, 정치의 문화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본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다름 아닌 문화가 자신의 자율성을 문화영역 안에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여 급기야는 타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상태 또는 그때의 문화논리를 지칭한다. Gephart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근대성의 뒤를 잇는 문화형태 또는 사회시점, 독특한 문화성을 띠는 새로운 사회형태로서의 과거지양체 또는 신세대를 경험하고 설명하는 개념을 함축하는 인식론이자 방법론 또는 문화산출의 스타일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한 무한한 새로운 해석가능성을 전제하는 탈근대주의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첫째로 해체(deconstruction), 둘째로 영구한 법칙이나 진리의 실재를 부정하고, 현실의 이해와 해석에서 다원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합리성(the cannons of modernity)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며,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마음의 변화(a shift of mind)를 학습하고, 그런 부드러운 사유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복잡다기하고 변화불측의 미래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본다(오명호, 1995; 강내희, 1996).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와 우리들 스스로를 다르게 이해하는 계기, 즉 생각되지 않았던 것(the unthought)들을 생각하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연구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존의 학술연구와 교육 등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해체'적 접근의 방법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후기 산업화와 후기 자본주의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사회형태나 사회조직의 물질적 재생산의 유형이라고 하겠으며, 오늘날 정보사회의 문화적 속성으로 보면 탈경험성, 다원성, 우연성, 탈규제성, 분산성, 불확정성, 탈규격성, 탈연속성 등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번져 나가고 있다(Fox, 1996).

지금 세계는 근대적 절대 진리와 주입식 지식교육을 비판하고, 과학맹신과 합리성을 비판하며 다양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학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술연구나 교육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바

꺼어지고 있으며, 그 목표는 창의적 인간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탈산업사회에서의 학술이나 교육 패러다임은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집단동질성 강조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차별성 강조로, 암기 및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력과 사고력 함양 교육으로, 강의 일변도의 수동적 학습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학습자 주도적 학습으로, 학벌 중시에서 능력 중시로, 통제와 위계질서 강조에서 자율과 참여의 강조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어운배, 1997: 59)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위기는 인문·사회과학의 위축과 '가슴' 없는 경제개발 중심 정책 추진 및 물질적 성장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 사학, 문학 등이 존폐 위기에 몰려 있고, 대입 수험생들은 소위 인기학과에 대거 몰려 들고 있다. 대학 내에서도 전과, 휴학, 편입학을 통하여 전산이나 영어 관련 학과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즉, '곧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실무교육 위주의 가능성이 중시됨으로써 권력에게는 귀찮고, 금력에게는 돈벌이가 못되며, 학생들에게는 불안한 인문·사회과학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국가적 청사진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술문화의 창달이 요구되며, 학술문화는 과학적 지식과 인문·사회적 지식을 생산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 투입한다. 과학적 지식이 과학과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동력에 해당한다면, 인문·사회과학적 지식

은 시민의 인지적 능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입안 및 실행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즉 산출된 국부의 유용성과 활용도를 가능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어느 한쪽을 중시하거나 융합시키기도 하는데 한국은 정책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송호근, 1997: 9).

한편,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고난의 시기일수록 연구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문학 부흥과 활로를 개척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870년대 일본은 명치유신 단행시에 학술진흥에 막대한 재정투자를 함으로써 학문을 부흥시켜 오늘의 경제대국의 기초를 닦았고, 1930년대 미국은 경제공황 타개를 위하여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영·미·일 등 소위 선진국들은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교육과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이들은 국가적 장기계획을 세워 과학기술개발을 도모하고, 특히 전통문화와 가치 등 삶의 방향에 관한 연구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 학술연구의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일반적인 학술연구 여건과 연구실적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진흥 장기종합계획'(1997)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학술연구 여건

첫째, 대학 육성에 대한 재정 투자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최근 20~3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에 대한 주요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일류 수준과 현저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바, 대학 여건의 개

선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온 실정이다.

둘째, 연구 경비의 부족 현상이다. GNP 대비 정부예산으로부터 지원되는 대학 연구비의 비중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18~30%에 불과하다. 즉,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대학 연구지원 예산의 규모가 작아서 개별 학술연구비의 지원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단기 지원에 편중되어 목표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창의적 개인 연구인 경우, 전체 연구자에 비해 수혜자가 적고 평균 연구비 지원액이 적어 연구의 내실화가 곤란하다.

셋째, 교수 인력 부족과 교수 사회의 경쟁 풍토 미약을 들 수 있다. 1995년 현재 교수 확보율이 74%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교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과도한 강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충실한 연구 수행에 장애가 초래된다. 우리나라 교수 확보율 기준은 대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저선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며, 국제적인 일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외국 대학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확보율은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중·고등학교보다 과다하며 초등학교보다 높은 실정이다.

1997년 통계청의 『'9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교수 1인당 대학생수가 34명으로서 초등학교 27명, 중·고교 22명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고서 국제경쟁력 제고 운운은 말도 안 된다. 외국 선진제국의 경우, 교수대 학생비는 미국 15, 일본 18, 독일 12명이다. 미국의 MIT와 워싱턴 대학은 10, 하

버드와 예일대는 11, 스탠퍼드와 에모리대는 12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 일인이 담당하는 학생수의 비율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빈약한 교원 확보에 그 원인이 있다. 학생수는 천정부지로 증가해도 그에 비례한 교수충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원 확보율은 1995년 74%, 1996년 56%, 1997년 55%로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교육부의 1997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은 51,248명인 데 비해 시간강사는 54,491명으로 3천여 명이 더 많다.

넷째, 학문 기초인력 양성과 지원 체제 문제이다. 연구 후속 세대 혹은 연구 지원 인력인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체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규모와 운영 면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박거용, 1997).

다섯째, 연구기반 시설의 미비이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시설과 장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장서 보유는 직·간접적으로 교수 및 학생의 연구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별 평균 장서량은 1997년 4월 1일 현재 30만 권이다. 서울대의 경우 164만 권이지만 미국 하버드의 1,100만 권, 일본 교토대의 310만 권에 비하여 절대적 열위에 있다. 또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와 공동활용 대형 연구시설의 부족으로 자연계열 첨단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1996년 현재 자연계열 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은 교육부가 정한 보유 기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노후 기자재의 적기 교체와 적정 유지·관리 인력 및 경비의 확보를 위한 대책

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전문정보 보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학술 정보 수집량이나 질이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섯째, 학술단체 활동의 비활성화를 들 수 있다. 각종 학술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빈약하다. 1996년말 현재 국내 학회는 총 821개인데 사회분야 학회가 전체의 약 29.7%를 차지하며 인문·사회계가 이 공계보다 많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경우, 1996년에 학술대회 개최 지원 및 학술지 발간 지원을 통하여 학회 등에 지원한 금액이 18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학회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의 규모도 영세하다.

일곱째, 학술진흥에 관련된 정부 조직 체계의 문제이다. 인문·사회과학에 관련된 학술진흥 업무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고급 인력 교육과 기초연구의 진흥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 농림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도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대학에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어 중복적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학의 연구 실적

첫째, 대학원 교육의 확대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의 진흥과 대학원 교육의 성장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바, 국내 대학원 교육의 규모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의 질적 발전은 양적 확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둘째, 학술연구 업적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교수의 연구 성과는 공개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으로 평가받게 된다. 1996년 교수 일인당 연간 국내 발표 논문수가 인

문·사회계 1.81편, 자연계 2.18편, 예·체능계 1.52편이며, 국외 발표 논문은 인문·사회계 0.13편, 자연계 0.31편, 예·체능계 0.07편, 그리고 저서 발간은 0.14편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자연계열의 경우 저명 학술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로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과학인용지수(SCI)를 가장 많이 택한다. 소위 서방 선진 7개 국가들의 논문수가 예외 없이 1위에서 7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 단지 수백 편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 들어와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매우 큰 증가 추세를 보여 1992년 세계 30위, 1993년 27위, 1994년 24위, 1995년 22위, 1996년에는 7,295편의 논문 발표로 19위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1995년 논문 증가율은 48.7%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자연계열과 달리 국내 대학의 연구 실적을 국제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척도가 없지만, 서울대학교 백서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적인 연구 성과의 규모에서 자연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이 훨씬 뒤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연구 성과에 따라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 외국 기관의 평가 결과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 16위, 연세대 18위, 고려대 31위로 발표된 바 있어 학문의 질적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3. 인문·사회과학 '위기'의 문제점과 대안

우리 사회는 정보화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 발달하였으나, 기술 발달에 걸맞은 정신문화는 상당히 저

급하다고들 한다. 예를 들어 첨단 자동차 생산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나, 그러한 기술 발달에 걸맞은 자동차 주행문화는 비례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한국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연계 학문이 가장 중시되어 왔다. 학문적 중요성이나 기여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실용성이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물질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지금, 기계문명의 발달과 인간성 상실에서 오는 갖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배규환, 1997 : 65).

보도에 의하면, 과학연구개발비는 계속 급증(『문화일보』, 1997. 12. 12) 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97년 12월 12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을 5% 이상 제고하여 향후 5년 동안 약 22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또 과학기술 문화기금으로 5백억 원을 조성하고, 민간 과학기술 문화단체를 대폭 육성해 나간다는 소식이다(『문화일보』, 12. 12). 특히 과학과 환경, 문화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과거 처 위상 강화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안)'(『세계일보』, 1997. 12. 22)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을 강화시킨다는 보도이다. 또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나 산업기술부로 승격시키자는 안과 교육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부로 통폐합하자는 안도 시안으로 발표됐다(『조선일보』, 1998. 1. 16). 물론 일면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 중심 정책에 국가총력을 결집한다고 하여 건전한 선진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

히 회의적이다. 눈을 돌려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을 제외한 광의의 인문·사회, 예술 부문을 지칭한다)의 경우를 보면 'IMF 구조조정 한파'로 당장 '98년 교육부 연구비 예산이 동결 또는 감축될 전망이다, 연구비 동결이나 감액은 학술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이어진다.

인문·사회과학 부문의 위기의 실태를 보자(박겨용, 1997 : 38).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인문·사회 대 자연계 연구비 지원액의 비율을 보면 8:92 또는 18:82 정도로 너무도 취약하고, 자연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 지원액만이라도 연구비 지원 총액 중 50% 정도를 인문계에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본다(설훈, 1997 : 306).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는 이렇게 이미 정부 연구 예산지원 비율 면에서도 예정되어 있었다. 1986년 이후 1996년까지 10여 년간 학술연구비 지원실적을 총괄적으로 보면 예·체능계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지원 비율은 30:70으로서, 어문 3.8%, 인문 6.7%, 사회과학 18%, 예·체능 1.9%이다(『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1997 : 38). 따라서 교육부 지원액만이라도 연구비 지원 총액 중 50% 이상을 인문·사회계에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본다.

앞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 선진국화는 과학기술 첨단화에 걸맞은 정신혁명, 정신학문이 밀받침되지 않으면 '정신공황'으로 이어져 사회적 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과학과 기술 우선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례로 대안을 찾아 보기로 한다.

첫째, 인문·사회과학계의 경우 중·장기 학술 발전 비전이 전무하다. 위의 자연과학

개발비 증액 계획에서 보듯이 자연계의 경우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계의 경우 학술 발전을 위한 논의만 무성할 뿐, 국가 차원의 학술문화 발전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학술발전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15대 대통령 당선자는 '97년 12월 19일 기자회견문에서 "21세기를 경제와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고, 문화선진국을 향한 토양을 굳게 할 것과 21세기 시대변혁에 걸맞은 국가 경영 철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문화·학술 발전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학술문화 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주도면밀하게 집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 그의 핵심은 고등교육 진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술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비전 제시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집권적이고 통제지향적인 행정 및 정책 사고(policy mind)와 조직 행태의 근본적 혁신 패러다임 도입과 그에 따른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신정부는 무엇보다도 정신학문을 회복, 정립시켜야 국가 발전 토대가 굳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신정부는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학술연구 지원 개선 계획'을 통하여 학술진흥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진단하고, 그 개선안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예술·인문학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를 설치하고 '창조적 미국'(Creative America)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어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강내희, 1997: 65). 계획의 일환으로 학술원이나 학술진흥재단 산하에 (국·공립)철학연구소 또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여성연구소 등 (국·공립)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잉공급된 고급인력을 제도적으로 흡수함은 물론 학술발전에 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인문·사회과학 학술발전기금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면 구두선일 뿐이다. 1980년대 초반 학술재단 설립 초에 조성된 학술진흥기금은 1994년 12월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시 영세기금으로 분류되어 폐지되었다. 학술진흥 사업의 안정적·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술연구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학술진흥 사업의 독자적·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금도, 재정 수입원이 될 자체 수익 사업도 없이 재원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요, 문제점이다. 앞으로 재단 사업의 자율성·독자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보조금 사업에서 탈피하여 출연금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사업의 안정적·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술연구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기금조성 제한사항을 해제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다각적 방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학술단체 지원 활성화 대책 및 학술단체연합회의 적극적 활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7년 현재 약 1,100개로 파악되는 한국의 학회는 대부분 주소가 항구적인 사무실을 갖고 있지 못하며, 정상적인

재정 수입으로 정기적인 학술지를 제대로 간행하기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문·사회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민현구, 1997: 46~52). 인문·사회분야 학회의 경우, 회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학회 소재지가 바뀌고, 상근 행정요원이 없어 국내·외의 연락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술회관을 건립하여 안정된 사무실과 회의장을 확보하고, 필요한 정보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지난 1997년 12월 11일 발족한 학술단체연합회는 창립 취지문에서 “학술진흥을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정부와 학술연구 지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및 건의”를 통하여 학술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한다 바 있어 그 역할이 기대된다.

넷째, 지방대학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교 존재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폐지를 검토한다(오마에 겐이찌, 1997: 97; 박거용, 1997: 39). 즉, 지방화시대에는 대학도 지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의 자율적 학술문화가 꽃피으로써 지역의 독창성을 계발하고, 지역문화와 학술을 진흥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향토문화의 활성화 등 지역의 독창성이 결집되어 학술의 질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대학 관리 인력과 그들에 의한 대학 자율성 침해가 심화되어 왔다. 대학의 학문 자율성 침해에 대한 방지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법규

적 통제와 감독은 여전하다.

다섯째,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민간 차원의 인성(심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각 개별주체들의 경제적 소득 증가에 따른 인간행복의 증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문명의 부산물인 비인간화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인간존중의 민주 시민교육 또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 실시 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이양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섯째, 학술지원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취약하다. 현재 우리의 학술진흥지원 기구는 학술진흥재단이다. 학술연구자들은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에 연구비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 기관은 교육부 산하에서 인문·사회분야와 자연계까지 지원하는 광범위한 학문을 관장하고 있어 문제이다. 한국과학재단의 경우, 자연계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자연계 분야는 중복적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진흥법에 따라 1981년 교육부 학술연구 지원행정의 전담 기구로 설립되었으나, 1997년 현재 총예산 740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86%가 교육부의 보조금이며 출연금 11%, 자체수익금 3%이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학문 분야의 교수급 연구인력이 33,000명인 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술진흥재단은 재무구조 및 운영상 교육부 수탁사업의 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우수한 선진국 연구지원 기관과 같이 사업추진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박상대, 1996; 1997: 3).

근래 들어 그 동안 거론되었던 교육부의 기초과학연구소 지원업무 등을 학술진흥재단 업무로 이관시켜 학술지원기구 활용도를 제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진 각국은 학문적 경쟁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의 직속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학술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립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박거용, 1997 : 39 ; 설훈, 1997 : 245~253).

끝으로 사회과학의 도구화와 인문·사회과학계의 내부적 성찰의 빈곤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한국의 정치현실은 인문·사회과학이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방법, 그리고 저변 확대를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토론, 비판과 반비판의 場을 폐쇄시켰다(배규한, 1997 : 69).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중심정책은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현실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처세의 방법을 터득하고, 논쟁의 폭이 실용성에 국한됨으로써 학문적 논쟁이 수그러들고, 또한 한국 특유의 권위주의와 맞물려 비판과 반비판이 자리할 수 없는 상호간 적당한 칭찬만이 남게 되어 학문적 발전에 저해를 초래하였다.

특히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학계와 문화계까지 모두들 미국 중심의 학문과 수학자들로 채워진 학문적 미국화 현상의 극심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국가위기를 좌시하고 방관해 온 인문·사회과학계의 책임은 결코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국가체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성들을 반성하며, 비판하고 심층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철학이나 사회과학이 스스로 뼈를

까는 마음으로 자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이종수, 1993 : 177). 왜냐하면 인문·사회과학계는 그 동안 국내 민주화나 중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우리 현실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실비판과 대안제시 노력을 등한시 해온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술계의 주체적 자기반성과 성찰 및 실천적 대안제시 노력이 필수적이며, 그의 핵심적 노력은 학문적 주체성 회복이라고 본다. 그 방법과 지향점은 한국 학술문화의 독창성 발견과 확립 및 보급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 뿌리를 둔 연구가 중시되어야 한다(배규한, 1997 : 74). 예를 들어 국학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정구복, 1997 : 154). 국학진흥 당국은 1986년부터 국학진흥연구지원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7년 현재 국학진흥 및 민족문화 창달 기반 구축, 사장된 고자료 발굴 보존 및 활용도 제고에 노력중이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 고전 중에 『조선왕조실록』은 책수가 무려 1,893권, 888책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역사기록 유산이다. 동 자료는 조선시대의 역사, 문화, 일반생활상 등 한국사 연구에 가장 기본자료가 됨은 물론 한국학 분야 전체와 사회과학 분야 등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 민간단체에 의해 총 413권으로 완역 발간된 『조선왕조실록』은 얼마 후에 곧바로 『CD롬 국역 조선왕조실록』으로 내장되어 우리 국학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박종국, 1996). 이러한 연구성과가 전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민족의 정체

성을 회복시키고, 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한국의 전통소리를 국제적 문화상품으로 부각시켜 성공한 좋은 예이다. 즉, 한국의 독창성을 살리면서도 서양인의 기호에 맞게 국악 연주를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국제경쟁력을 살리려면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적 혼과 독특한 정서 및 상상력을 상품화하여 감동을 전달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통 학술문화의 재조명을 통하여 세계와 교류하는 학술문화의 개념을 재정립해야만 한다(『중앙일보』, 1998. 1. 13).

한편,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박사급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며, 학문적인 물적 자원의 부족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997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월 현재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모두 52,629명이다. 외국학위 취득자 15,350명을 더하면 67,970명으로 약 68,000명이 된다. 1982년부터 1997년 10월까지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외국 박사학위 취득 현황을 보면 자연계 8,637명, 인문계 6,713명으로 모두 15,350명이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9,407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2,346명, 독일 1,28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학술진흥재단소식지』, 1997. 6/4: 26). 그런데 한 마리의 황소개구리가 왕성한 서식으로 토종 개구리를 멸종시켜 가듯이 학계도 유사한 형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몇몇 대학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외국박사 채용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풍조까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수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문제이다. 심지어 몇몇 지방사학들은 '국제화 운운'하며 외국인교수

를 채용하고, 근래 들어 '산학협동 운운'하며 전문직업인들을 임용하고 있어 더 더욱 사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설훈, 1997 참조). 따라서 교수와 연구원 충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수학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독자성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라의 의상은 유학을 가서 당의 불법을 연구했으나, 원효는 스스로 깨우쳐 해동종을 창시했다. 자국학문에 대한 불신풍조가 너무 깊다. 그러나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살아 남는 길은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자국에 뿌리를 둔 자국학문 양성이 국가발전의 토대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특히 외국 수학자들의 자국학문에 대한 학문적 하대를 금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학문방법론과 접근법을 극복하고 탈중심적인 학문자립기반을 다지는 게 시급하다. 미국 중심의 추종학문과 학자들은 여전히 신식민주의적 문화를 보급하고, 국가를 관리하는 위치에서 그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문자립기반의 계속적 침식과 학연과 지연 등에 따른 상호 정보교환 등으로 국내 중소대학 수학자들의 입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모교 출신 교수임용은 아직도 여전하다. 서울대의 경우 93% 내외로 모교 출신이 교수로 임용된다.

이렇게 위축된 국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문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학문과 학술은 후진사회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진입은 학술의 선진화를 토대로 구축된다. 학술의 선진화는 학문후속세대의 적극적 육성

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보았듯이 1990년대 들어와 대표적 학문후속세대인 박사실업자는 과포화 상태이고,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 또한 계속 늘어나다가 1994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은 현상의 첫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많은 대학들이 전임교수 대체용 시간강사에 강의의를 의존하기 때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강사들의 대부분은 박사학위 과정중에 있거나 국내·외의 학위취득자들이며, 대다수가 가정을 가진 가정주부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국가의 학술연구비 지원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똑같은 학위를 취득하고도 누구는 전임교수 자리를 확보하여 내외적인 다수의 연구에 참여하고, 누구는 지원자격조차 얻지 못하여 극빈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자격 차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교수의 법정 정원 상향 조정제도 개선과 연구비 신청자격 완화 조치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교수 대 학생비를 낮추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학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박사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부족한 교수원 제도적으로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 연구지원 재정을 확보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연구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60%인 교원확보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법정 정원을 철저히 지원시키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위취득 대학강사들에게 학술진흥

기관 공모과제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이들을 책임연구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 공모과제 지원은 자유공모과제, 지방대 육성과제, 신진교수과제 등이 있다. 또한 강사료도 현실화하여 지급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현재 각 대학은 학기별로 강사를 임용하여 기간이 지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강사료는 강의하는 월수인 4개월 동안만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강사들은 전임교수와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강의준비, 성적채점, 과제물 지도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셋째,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박사후 연수(Post-Doc.)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자 전원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진 연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최소한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인문·사회계 박사후 연수제도의 경우, 처음 시행된 1996년은 777명 지원에 407명 선정, 1997년에는 1,081명 지원에 국외 168명, 국내 388명 모두 556명으로 1/2 정도만이 선정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지원자나 정보를 모르고 있는 수만 명의 대다수 강사들은 지금도 '보따리장사'에 운명을 걸고 '강사 시간확보와 1회용 시간때우기'에 분주하다. 따라서 박사후 연수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성을 띠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학 4학기제의 도입을 활성화한다. 4학기제 실시는 대학의 시·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사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다.

4. 결 론

오늘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배경에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미흡과 실정, 경제정책, 재벌구조의 폐해, 정경유착, 관료 부패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의 국가위기를 좌시하고 방관해 온 인문·사회과학계의 책임 또한 면죄될 수도 없고 또 면책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이나 학술연구의 진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학술문화가 발전되고, 이에 따라 세계 속의 우리 위상이 제고되며, 역사 속의 우리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21세기 한국의 학술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한 바, 종합적인 학술진흥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광의의 인문학의 의미는 인간과 자유라는 뜻을 함축한다. 즉, 모든 종류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로운, 참다운 자유인이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이다.

통제받는 학술이나 대학에서 양질의 연구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기술 발전과 성공은 벤처기업 육성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벤처기업은 창의력의 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란 기존의 지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연구기관들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근본정신이 있어야 한다. 근본정신의 배양은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과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존중 풍토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학술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조화로운 발전정책

으로 수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과 학술발전기금 조성 등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균형있고 창의적인 학술정책으로 학술발전 환경과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등의 개정과 관련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정 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학술진흥재단은 독립적·자율적으로 학술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대학 학술연구 지원을 체계적이며, 대규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 재정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인비(A.J. Toynbee)는 “극소수의 창의적 인간만이 인류문화의 질을 한 단계 높이며, 대부분은 현존 문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21세기는 창의성의 시대이다. 창의성을 키우는 유일한 길은 학술환경과 학문연구 주체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길뿐이며, 창의성과 자율성의 신장은 인문·사회과학의 진흥과 제도적 혁신에 있음은 자명하다. 인문·사회과학은 창조력과 비판적 사고를 계발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하며, 그의 열매인 새로운 예술작품이나 학술연구물들은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고 인간의 사유와 창조의 유산을 풍부하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인문 학술문화의 발전이야말로 경제발전의 근원적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경제가 육체라면 학술은 정신이다. 따라서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과학기술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인문·사회과학을 홀대하거나 침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균형있는 학술발전정책으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내회(1996).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진단과 전망. 『중대신문』, 1996. 10. 7.
- 강내회(1997). 21세기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 『현대사회의 인문학—위기와 전망』,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 교육부(1997). 『교육통계연보』.
- 김경희(1996).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교육의 이념과 과제정립에 있어 현대성, 탈현대성과 관련된 쟁점. 『현대성, 탈현대성 그리고 동서양의 관점에서 본 사회교육의 이념과 과제』, 국제사회교육 학술회의 논문집.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 민현구(1997). 학술발전을 위한 학술단체 지원 대책.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학술발전』,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거용(1997). 한국 인문학에 대한 정책: 지원과 평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인문학—위기와 전망』,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 박상대(1996). 『한국학술진흥재단 발전장기계획(1997~2011): 대학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지원 방향』, 한국학술진흥재단, 1996. 8.
- 박상대(1997).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재단의 위상정립과 지원정책 개선 방안. 『학술진흥재단소식지』 제6권 제2호.
- 박은희(1995). 『포스트 모던 조건과 수용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 박종국(1996. 11. 22). 조선실록 CD롬과 한국학. 『한국경제신문』.
- 배규한(1997). 인문·사회계열 학술진흥을 위한 장기계획.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학술발전』, 한국학술진흥재단.
- 서울특별시(1996). 『서울시청뉴스』 제80호, 1996. 9. 12.
- 서정현·허병기·이종수·송종진·김민조(1998). 『학술진흥 정책과제 기본구상』,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실.
- 설 훈(1997).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대학의 과제』, 흥기회.
- 송호근의(1997). 학술진흥정책의 기초이념.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학술발전』, 한국학술진흥재단.
- 어윤배(1997). 사립대학의 경영전략과 당면과제. 『대학교육』 통권 89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오마에 겐이찌 저. 노부호 역(1997). 『국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강대 출판부.
- 오명호(1995). 『현대정치학방법론: 이론과 주요접근을 중심으로』, 박영사.
- 이종수(1993). 한국행정체제의 비판적 인식. 『연구논집』 제12집. 중앙대 대학원.
- 이종수(1996). 지방자치행정의 탈근대적 패러다임. 『중앙행정논집』 제10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이종수(1997. 12. 8). 오늘의 난국, 기술 부재담. 『세계일보』.
- 정구복(1997). 국학진흥사업의 성과와 과제.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학술발전』, 한국학술진흥재단.
-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학술진흥재단(1997). 『학술진흥 장기종합계획』, 정책연구실.
- 한국학술진흥재단(1997).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 한국학술진흥재단(1997). 『학술진흥재단소식지』 제6권 제4호.
- Boje, David M, Robert P. Gephart, Jr,(ed.)(1996). *Postmoder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Sage Pub.
- Fox, C.I.(1996). Reinventing Government as Postmodern Symbolic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1996, Vol.56, No.3.
- Naisbitt, John & Aburdene(1990). *Megatrends 2000*. New York : Warner Books.
- Toffler, Alvin(1990). *Powershift :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 Bantam Books.

이종수/한국외대에서 행정학 석사,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 법대와 사회과학대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정책연구실 포스트 닥으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정부관료제 비판의 이론적 고찰", "학술진흥 정책과제 기본구상" 외 다수를 발표했다.